

野 “日 오염수 대책기구 설치”…與 “보고서 받아들여야”

국힘 “피담 멈추라”…민주, 의총 소집·수산업계 피해 보상 입법 검토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보고서 발표와 관련, 여야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종합보고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TF(태스크포스)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

있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 다 한들 귀 기울일 사람은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내내 거짓 선동을 일삼다 중국에 이르러서는 IAEA의 검증조차 못 믿겠다며 유엔으로 달려가겠다는 황당한 발상도 내놓았다”며 “유엔 산하 독립기구를 못 믿겠으니 유엔총회에 회부하겠다는 가담지도 않은 어불성설이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대정부 질문에서 당당히 말했다”면서 “이제와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하니,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의 검증 결과가 나온 만큼 민주당은 이제 과담 정치를 중단하고 오직 국민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회의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철저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고, 방류 현실화에 대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성격의 종합대책기

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과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활동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기구로, 일종의 종합상황실 개념이다.
권철수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산발적 대응을 더 유기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IAEA가 보고서를 내고 실제로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다면 더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가 공개되는 대로 자체 분석 작업을 마친 뒤 긴급 최고위원회는 물론 비상의원총회도 소집해 대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현실화에 따른 국내 수산업계 피해 보상을 위해 별도의 입법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나 국제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의 UN 총회 안건 채택을 위한 외교적 노력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태평양 도서국들에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연대하자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힘과 협의되지 않으면 야당끼리라도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정의당과는 어제 함께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주최 | 광주시민회의, 시민참여정치를 이끄는 광주전남민회, 다른
김태섭 전 국회의원이 4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제3정당의 시대적 요청과 그 가능성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광주 온 금태섭 “제3세력 필요”

신당준비모임 시의회서 토론회 “신당 임무는 선택지 넓히는 것”

신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를 찾아 제3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 의원은 이날 자신이 주도하는 신당 준비모임 ‘다른 미래를 위한 성장과 모색’과 광주시민회의가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 토론회에서 “신당의 첫번째 임무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거의 모든 분들이 ‘국민회의도 썩었고, 민주당은 무능하고,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투표장에 가서 관성에 따라 민주당이나 국회를 뽑는다면 우리 정치는 변하지 못한다”며 “유권자도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그러면서 “새로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현재의 (양당)체제에 안주해서 시민들의 삶과 상관이 없는 문제에 공방을 벌이는 기존 정치세력을 몰아내고 주권자들의 의사를 모아 제7공화국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다”고 신당의 임무를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추구하는 신당과 기존 정당간 차이점에 대해서는 “소득불균형, 저출산 등의 원인인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편 가르기를 봉합하고 공동체 인식을 높이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인데 기존 정당이 이 역할을 못해 우리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바라는 선택지를 열어줄 수 있다”고 신당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여사 일가 고속도 특혜 시도”

민주당 “이권 카르텔 수사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어 공세를 이어갔다.
송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을 깨뜨리는데 이권 카르텔을 뒤틀어주고,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형적 이권 카르텔을 소개하겠다”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뒤 “국민회의 소속인 양평군수와 김 여사 가족들이 진정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돈봉투 의혹’ 송영길 턱밑 겨는 검찰

측근 보좌관 구속…의원들에 돈봉투 조달 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섰다.
2021년 전대 당시 캠프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 전직 보좌관 박승수(53)씨를 구속함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5일 박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3일 구속된 후 첫 피의자 조사다.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박씨는 돈봉투 의혹 전반에 핵심 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5000만 원을 받고 6750만 원을 샅포한 혐의(정당법 위반)

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2021년 4월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5000만 원을 받고, 보관 중이던 자금을 합쳐 무소속 의원에게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윤 의원이 이 돈을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로 나눠 4월 28~29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샅포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윤 의원과 무소속 여성 만 의원의 구속 수사가 무산된 검찰은 박씨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의혹의 핵심 줄기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박씨는 송 전 대표 개인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자금 조달 의혹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연합뉴스

양향자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확정

지역민에 명절 선물 보낸 혐의…형사보상금 724만원 보상 받아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 무죄가 확정된 무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율) 국회의원이 형사보상금 724만 원을 받는다.
4일 관보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724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양 의원과 보좌관 A(52)씨와 함께 지난해 1월 28일부터 지난해 2월 9일까지 선거구민, 선거구민과 연가도 있는 지역민 등 43명에게 190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명절 선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양 의원에게 무죄를, A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13만5000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

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후 양 의원은 무죄 확정 판결 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 청구하는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724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봄에 떠나는 그림의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
-------------------------	-----------------------------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